

---

# 최운열 前 의원 초청 특강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스크립트 요약

---

여연 아카데미

### <인사말씀>

저 같은 사람을 부르기가 어려웠을 텐데 지상욱 원장님이 깨어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전직 의원을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 앞에 특강을 초대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내에 있을 때도 굉장히 이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파가 서로 싸울 때는 싸우지만 궁극적으로 정치가 추구하는 것은 민생의 후생 증진이 아닌가 합니다. 국민이 잘살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야가 어딴고 보수, 진보가 어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양당 원내 총무실도 방문해서 여당 의총에 야당의 정책통을 불러서 얘기하고, 야당도 여당의 정책통을 불러서 얘기를 서로 들어보면서 상호 교류를 통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밖에서 얘기하다 보면 합의점을 찾을 텐데 그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웠는데, 지 의원이나 저나 이제 21대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과정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ppt 1page

- 강의 주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 주요 내용: 최근 입법 과정에 있는 경제 3법 관련  
경제 3법은 친기업법인가 반기업법인가

### ppt 2page

- 한 나라의 경제 주체: 가게, 기업, 정부
- 정부와 가게는 스스로 돈을 만들어내지 못함.
- 정부 사업의 원천은 개인이 내는 소득세와 기업이 내는 법인세
- 소득세의 원천은 기업
- 따라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기업 활성화
- '약무기업 시무노동': 기업이 없으면 노동이 존재할 수 없다. 나아가 기업이 없으면 한 나라의 경제가 존재할 수 없다.

### ppt 3page

-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주주, 경영자, 소비자, 정부, 근로자, 채권자
- 기업이 잘 되어서 피해 보는 사람은 없음. -> 모든 국민이 친기업이 되어야 하는 이유.
-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오해: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 기업의 주인은 주주. 우리나라 국민과 언론은 대주주 경영자를 기업의 주인이라고 생각.
- 기업이 잘 돼야 좋은 것인데, 시민단체와 민주당에서는 대주주에게 좋은 것이라고 규제 혁파에 반대.
-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업에 좋는데 오너에게 불편한 것은 반기업이라고 경제 3법에 반대.

### ppt 4page

- 언론의 태도: '조현아 사태'가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킬까 걱정된다.
- 경영행태를 개선하는 것은 '반기업'이 아님.
- 인터넷뱅크법 통과 관련: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인허가된 케이뱅크를 살리기 위한 법 개정을 민주당과 시민단체에서 반대.
- 비정상적인 로비 과정이 있었다면 당시 경영자들이 처벌받으면 되는 것. 케이뱅크에 페널티를 줄 이유가 없음.
- 두 가지 사항 모두 기업과 기업인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 ppt 5page

-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 기울어진 운동장
- 첫째, 수요와 공급의 기울어진 운동장
- 시중 유동자금이 1200억, 금리도 단군 이래 최저지만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음.
- 소득이 부족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
- 둘째,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의 기울어진 운동장 -> 오늘 강의의 주제.

### ppt 6page

-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는 양적으로 세계가 우러러볼 만한 성장.
- 질적 지표가 양적 지표를 따라오지 못함.

### ppt 7page

- 질적 지표들이 최소한 20위권 정도가 돼야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음.
- 이를 고치는 것은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님.

### ppt 8page

- 20대 국회에서 양 원내대표실을 방문해서 제안한 내용.
- '규제 빅딜': 국민의힘에서는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을 수용하고, 민주당은 과감하게 규제 혁파

## ppt 9-10page

- 상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으나 5대 재벌 총수 만찬 이후 이를 포기.
- 다중대표소송제: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 임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모회사의 주주가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음.
- 외국의 헤지펀드가 경영을 잘하고 있는 기업을 공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음. 이 제도를 통해 경영권을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만들자는 것.
- 주주총회에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함(전자투표제). 주주가 주총에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음.
- 감사위원 분리 문제는 현재 가장 강한 반대. 경영진과 분리된 감사 장치를 만들자는 것.
- 3% 제한 룰: 상장사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
- 현재 금융기업, 공기업에는 적용된 규정. 이를 확대 적용하자는 것. 세 명 중 한 명 분리선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함. 다만 건전한 경영을 위한 브레이크를 마련해두자는 것.
- 상법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 한국 기업은 약점이 많기에 정경유착의 폐해가 지속되는 것. 이를 방지하고, 기업을 독립시키기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

## ppt 11page

- 공정거래법: 핵심은 전속고발법 폐지.
- 1982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될 때에는 중소기업의 입지가 너무 약해서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게 법을 제정.
- 현재는 공정거래위 출신 변호사들이 대형 로펌에 소속되어 전관예우 관행을 통해 실질적인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음. -> 전속고발법 폐지해야
- 기타 공정거래법상 개선과제: 모든 경제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시행령이나 규칙 제정을 통해 별건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함.
- 금융통화감독법: 금산분리 폐지.
- 1984년 금산분리가 처음 도입될 때에는 시장에 돈이 늘 모자라던 고도성장의 사회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계열사에 사금고를 통해 돈을 몰아줄 가능성 존재.
- 현재는 삼성전자의 신용도가 우리나라 정부의 신용도 보다 높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이유가 없으므로 금산분리가 불필요.
- 만약 제조업 회사가 금융업을 하고 싶으면 현재 금융업의 높은 건전성 규제를 받으라는 것이 금융통화감독법.

### ppt 12page

- 코로나 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국 정부가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음.
-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
- 열거주의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변화를 따라갈 수 없음.
- 시민사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포괄주의를 합친 규제 형태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ppt 13page

- 재작년 삼성전가가 해외에서 한 M&A 규모는 10조 이상. 삼성이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활용해서 한국 내에서 인수했다면,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을 것.
-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국제 공급망이 많이 망가짐.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을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이 필요. 무작정 지방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에 있는 한국 기업을 불러들일 필요가 있음.

### ppt 14page

- 제조업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서비스업과 IT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업과 IT업을 합친 원격의료 기술을 보편화해야 함.
- 혁신창업기업을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 전체 기업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므로 벤처 창업기업에 한해서 도입해야 함.

### ppt 15page

- 노동개혁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친노조와 친노동을 명확히 구별해야 함. 현재 양대 노총은 전체 근로자를 대변하고 있지 못함. 노조가 아닌 노동을 위한 개혁이 필요.
- 현재 노동법은 1953년 제정. 모두가 9-6의 일반화된 고용 형태를 유지하던 시점의 노동법. 이제는 틀을 바꿀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 문제. 지역 규모,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함.
- EIT 제도(근로장려세제):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시 차액을 세금으로 지원 하는 제도. 이 방식을 택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었음.
- 아무리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도 2년 동안 최저임금을 30% 올리면 살아남을 기업이 많지 않음.

### ppt 16page

-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 동일노동 공정임금체제
- 직무분석이 잘 되어있다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시장경제의 논리.
- 현재 우리나라는 정규직이 돈도 더 많이 받고, 안정적이기도 함.
-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구분의 의미가 없어질 것. 따라서 임금체제를 선진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래야 수요와 공급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음.

### ppt 17page

- 어느 기업이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P * Q \leq S(r)$ 의 부등호가 성립해야 함.
-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임금수준이나 임직원 수 둘 중의 하나는 줄여야 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금수준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직원 수를 줄이는 인력구조조정이 발생하는 것. 앞으로는 임금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
- 즉, 노동개혁은 '쉬운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정치지도자들이 현장에 뛰어들어서 대화를 한다면, 노사정이 숫자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

### ppt 18page

- 근로시간 52시간제를 도입할 때에는 현 경제 상황이 유지되거나 혹은 좋아지는 것을 가정하고 도입.
-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가정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정책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음.
- 52시간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 ppt 19-20page

- 보편적 기본소득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 이를 위해서 재정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세정 개혁)
- 현재 우리 법인세 수준이 국제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살펴보아야 함.
- 소득세에도 문제가 있음. 현재 8800만 원에 대해 36%의 세율. 이 제도가 도입된 1994년에 8800만 원은 매우 큰 돈. 그러나 현재는 현대자동차의 평균임금이 9500만 원. 세율을 낮추고 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부담이 가지 않게끔 하고 2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를 가지고 재산증식을 하지 못하도록 과감하게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 관행을 개선해야 함.
- 세출 측면의 복지지출 문제. 현재 2중, 3중으로 지출되는 복지지출이 많음. 이를 단일화,

구조정만 해도 전체 세출에 10%는 아낄 수 있을 것.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어떻게 할지를 여야가 지혜를 합쳐야 할 것.